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방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Branche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곽 동 철(Dong-Chul Kwack)*
심 경(Kyung Shim)**
윤 정 옥(Cheong-Ok Yoon)***

목 차

- | | |
|--------------------------------|------------------------------|
| 1. 서론 | 3.3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논란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방향 제안 |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1 국립중앙도서관의 법적 및 업무적 역할의 분석 |
| 2.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및 법정 역할 | 4.2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방향 |
| 3.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건립 추진현황 분석 | 5. 결론 |
| 3.1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계획 추진 경과 | |
| 3.2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추진 내용의 상세 분석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논리적, 법적 근거 및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된 분관 건립(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황에 보다 적합한 분관 건립을 위해 지향할 바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또 다른 대규모 공공도서관”과 동일시하거나 “지역균형”이라는 단순한 지역안배 차원의 논리에 기반하여 건립해서는 안 되며, 국가차원의 기록문화유산 보존 및 지식강국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및 국가 전체의 도서관 체제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지향점으로는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정체성 확립 및 기능의 강화,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접적 대국민 서비스 강화,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식격차 해소 기능 분담 및 특성화를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logical and leg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new branch librarie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NLK) and then to propose the strategic direction of planning the branch(es) as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future delivery of NLK services. In this research, it is emphasized that the branch(es) of the NLK should not be perceived as “another large public library,” but rather be planned to help consolidate and expand the basic roles of the NLK and reinforce its identity as a national library.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branch(es) should be located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facilitate the services to the larger public, and some programs and activities for the underprivileged and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our society as well.

키워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국가대표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ranch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kdc.kdc@hanmail.net)

** 아이리스넷 대표이사(shim@irisnet.co.kr)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jade@cju.ac.kr)

논문접수일자: 2009년 2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09년 2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3월 3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해방 후 ‘국립도서관’으로 출범한 이래 지난 60여년에 걸쳐 법으로 명시된 국가대표도서관의 책임을 맡아오고 있다. 그동안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 건물로 이전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국가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면서 외연 확장은 물론 대국민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전산화, 각종 서지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대국민 서비스의 확장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의 발전이 경제 분야를 포함하는 사회전반에 거친 선진화로 상향된 국민의 정보요구와 보폭을 맞추는데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와 서비스 이용 등의 혜택이 거의 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그밖에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에서 명시한 국가도서관의 기본기능 중 핵심인 “국가 기록유산의 포괄적 장서”의 보존을 위한 수장 공간의 한계치 도달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압박해 있다. 2008년 12월 완공된 ‘국가디지털도서관’에 마련된 추가 서가공간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10년 내에는 다시 현재와 같은 수장 공간 문제가 반복하여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2010』에서 국가기록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 관리를 위해 “국내 자료보존처리센터 역할 수행 및 권역별 자료보존관 건립”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2006년에 개정된 ‘도서관법’ 제18조 제2항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설립 가능성을 법적으로 확인하였다.¹⁾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 3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 기본계획』이라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로 4개의 분관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분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서관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한 해석과 주장이 혼재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서로 연관성을 가지지만 사실상 국가와 시·도라는 개별 주체가 각기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과 지역대표도서관 건립이 맞물려 논의되면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논리적, 법적 근거 및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된 분관 건립(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황에 보다 적합한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을 위해 지향할 바를 제시

1)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5조 제2항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은 업무 분장을 위해 필요한 때 분관을 두도록 정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을 법적 설립 근거와 시대적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고, 둘째,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계획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현재까지 분관 추진에 관련된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전반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위상 및 정체성 확립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분관이 분담하여 수행할 업무 내역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 문헌 및 사례분석, 인터뷰의 방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등 문헌의 분석, 주요 선진국 국가대표도서관 관련 논문 및 사례조사에 집중하였다. 국내의 관련 연구보고서는 작성된 시점의 상황과 현재를 비교하고, 특히 원칙과 현실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필요 시 선행 연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연구 보고서의 내용과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2.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및 법정 역할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및 법정 역

할을 이 기관의 전신인 일제하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부터 1945년 해방을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 규정, 운영 방침 등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정리하면²⁾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해방 이후 1963년 처음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된 도서관 관련 법 상에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았다. 지난 2006년 개정된 현행 '도서관법'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기능과 법정 역할을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1) 도서관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 설치, (8)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9)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은 상기한 법정 역할에 따른 주요 추진 사업을 <표 3>³⁾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의 법적 기능과 역할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이전부터 도서관 관련법에 명시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가진 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

2) 광동철, 2004,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수립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205-227의 내용에 최근 도서관법을 추가하여 재정리함.

3) 현행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표 1〉 국립중앙도서관의 시기별 기능 및 법정 역할(1924-1991)

	근거	기능 및 법정 역할	비고
총독 부도 서관	사명 (1924) 운영지침 (1933)	(1) 특히 조선통치의 주요방침에 기초한 사상의 선도, 교육의 보급, 산업의 진흥에 관한 신고(新古)도서를 모을 것 (2) 조선민족의 문헌을 수집할 것 (3) 광의에 있어서의 조선연구에 관한 화한양서(和漢洋書)를 수집할 것 (4) 전선(全鮮)에 대한 도서관 보급, 발달을 도모하고 지도자가 될 것	사상선도기관 + 공공도서관
국립 도서관	직제 (1949) (1957)	[제1조] 도서 및 기록류를 수집·보존하여, 공중의 열람·참고에 공하며, 아울러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를 행한다	공공도서관
국립 중앙 도서관	도서관법 (1963)	[공공도서관의 기능] (1)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상의에 응하는 일 (2)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행사를 주최하거나 장려하는 일 (3) 다른 공공도서관 또는 학교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과 협의하여 도서관 자료를 상호 교류하는 일 (4) 도서관업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1) 국가에 관한 문헌의 수집 및 보존 (2) 국내외서지의 작성 및 그 소개 (3) 도서관자료의 국제교류 (4) 도서관학에 대한 조사, 연구 (5) 타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업무에 관한 지도 및 원조	공공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 중앙 도서관	도서관법 (1987, 전 면개정)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1)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의 이용 (2) 다른 도서관과의 정보자료의 유통 (3)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4)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정보협력망의 총괄 (5)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6) 다른 도서관에 대한 업무 및 사회교육활동의 지도·지원 (7)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8) 사서직원의 연수 (9)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기타] (1)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주최 또는 장려 (2)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상호 협력한다.	국가대표도서관 + 공공도서관 + (국회도서관) *사회교육활동
국립 중앙 도서관	도서관진 흥법 (1991)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1)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의 이용 (2) 국내자료의 남본관리 (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4)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5)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통합 (6)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7) 다른 도서관에 대한 업무·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지도·지원 (8)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9) 도서관직원에 대한 연수 (10)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기타] (1)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대표도서관 + (국회도서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표 2〉 국립중앙도서관의 시기별 기능 및 법정 역할(1994-2006)

근거	기능 및 법정 역할	비고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및 독서진흥 법(1994)	<p>[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p> <p>(1)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p> <p>(2) 국내자료의 제출관리</p> <p>(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p> <p>(4)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p> <p>(5)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및 도서관협력망의 총괄</p> <p>(6)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p> <p>(7) 다른 도서관 및 문고의 업무·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지도·지원</p> <p>(8)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p> <p>(9) 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p> <p>(10)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p> <p>(11)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p> <p>[기타]</p> <p>(1)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p>	<p>국가대표도서관 + 문고 + (국회도서관)</p> <p>*문화활동 및 평생교육</p> <p>*독서진흥</p>
국립중앙 도서관 도서관법 (2006)	<p>[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p> <p>(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p> <p>(2)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p> <p>(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p> <p>(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p> <p>(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p> <p>(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p> <p>(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를 둔다.</p> <p>(8)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p> <p>(9)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p> <p>[기타]</p> <p>(1)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p>	<p>국가대표도서관 + (국회도서관)</p> <p>*도서관연구소 (도서관발전정책개발조사연구)</p> <p>*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지식정보 격차 해소)</p>

〈표 3〉 국립중앙도서관의 법적 기능과 역할 및 주요 추진사업

법적 기능 및 역할	주요 추진 사업
(1) 도서관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수립 계획의 시행
(2)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 납본제도의 운영 - 자료의 구입, 수증, 교환 등 - 보존서고의 운영 - 참고·정보봉사 - 국내 자료교환 및 지원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 국가서지 편찬 - 문헌정보처리 표준화 도구 개발 - KORMARC 개발 및 유지·발전 - 학술논저종합색인의 작성 및 발전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 도서관정보망 구축 - 디지털도서관 사업 -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 사서직 공무원 직무교육 - 사서직 공무원 해외연수 - 사서자격증 발급·관리(한국도서관협회 위탁) - 공공도서관 협력망 운영 -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 각종 문화 전시회 개최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 자료의 국제교환 - 해외 한국학연구 지원 - 국제기구 및 회의 참여 - 도서관인 해외 상호교류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 도서관연구소 설치 운영 - 도서관 관련 학술지·소식지 간행 - 학술세미나 개최 - 전국 도서관전산화 현황 조사 - 문헌정보학 자료실 운영
(8)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관련부서와 협력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 국회도서관과의 협력
(9) 독서활동을 위한 도서관의 지도·지원	- 독서활동 촉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취약지역 주민 도서보급 및 독서진흥 - 각종 문화시설·교육시설 등과의 협조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은 현행 '도서관법' 직전까지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차원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발전 관련 기획기능은 약화되었지만, 반면에 정책개발이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한 역할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해방 이후 육십여 년 동안 발전해 가며 몇 차례 도서관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반 기반 환경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건립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3.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건립 추진현황 분석

3.1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계획 추진 경과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추진 경위 및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5. 6: 『부산 발전 2020과 전략사업 구상』에 “국립부산도서관” 유치 명시
- 2005. 9: 부산시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부산분관건립 요청
- 2005. 10: 문화부장관 ‘부산국제영화제’ 방문시 부산시장 건의
- 2005. 10: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국립중앙도서관 2010』 수립
- 2006. 3: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 기본

- 계획』
- 2006. 8: 『행정도시내 종합도서관 건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장관 보고
 - 2006. 12: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기본구상 연구』
 - 2007. 2: 행정도시내 종합도서관 건립 등 문화시설 추진방향 수립
 - 2007. 9: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대구지역 유치관련 타당성 [실현가능성] 검토보고서』
 - 2007. 12: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2008. 4: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설립관련 타당성 검토 연구』
 - 2008. 5: 『국립도서관 분관 건립과 지역대표도서관 연계방안 연구』
 - 2008. 5: 『행정도시 종합도서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2008. 6: 『국립광주도서관 기본구상 연구』

3.2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추진 내용의 상세 분석

여기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주요 선행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 기본계획 연구⁴⁾
2006년 3월 완료된 이 연구는 “서울 중심의 집중형 국립도서관 시스템을 집중-분산형으로 재편하기 위한 논거를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국립분관 건립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부산시와 문화관광부가 2006년 최우선 사업계획으로 제안한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당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부산분관 건립의 타당성과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부산분관을 포함한 권역별 4대 분관건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분관 설립의 당위성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부족한 수장 공간 문제 해결”과 “국립중앙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공간 부족현상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임을 제시하였다(윤희운 2006, 52-58). 즉, “자국 출판물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이라는 국립도서관의 명제에 따른 수장 공간의 확장 요구와 더불어 “지식강국화 전략, 전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가장서에 대한 공평한 이용기회의 제공, 지역단위로 산재하는 공공 및 대학도서관 등의 수장 한계” 등 요인이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분관 설립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지역분관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논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지역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대행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 연구는 부산분관이 시급히 건립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2004년 말 현재 부산광역시 산하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일개 관 당 봉사대상 인구의 수,

4) 윤희운. 2006.3.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 기본계획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일인당 소장 책 수 등 면에서 전국 평균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윤희운 2006, 100).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엄밀히 말하여 특정지역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대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외국사례를 보아도 국립도서관 분관이 설립되어 그 지역정보서비스에도 기여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그 분관도 물론 도서관 시설과 장서를 공개함으로써 직접적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비전을 갖고 지역주민의 기본적 정보 접근 및 이용권한을 위해 설립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는 공공도서관의 현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그 역할 수행을 위해 건립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건립은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 수준과는 절대적으로 분리된 목표와 정책적 결정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논리는 반박이 가능하다. 바로 이 점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라는 연구목표에서 평가기관의 초점을 흐려놓아 역효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논리는 뒤에서도 논하겠지만,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평가(한국개발연구원 2007)에서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전국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는다고 때문에 부산분관의 건립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짓는 오류의 원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보존서고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연구는 부산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이 조만간 심각한 공간부

족에 직면하게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 도서관 내지 광역도서관의 서고공간을 확충하거나 별도의 공공보존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선진국형 국립도서관 시스템의 구성, 국가장서에 대한 접근격차의 해소, 지자체의 건축 및 운영재원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면 부산분관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윤희운 2006, 101-102).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존서고로 쓰기 위해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어떤 건물이든 전부 혹은 상당부분을 보존서고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목적용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자료 보존을 위한 시설은 다른 나라의 공동보존서고들처럼 창고형(warehouse) 건물, 고밀도서가, 환경통제장치 등으로 설비하고, 자료 열람, 상호대차나 문헌제공서비스 등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공간으로 할애하며, 최소의 인적 자원만 있으면 된다(곽동철 2006). 그럴 경우, 건물의 입지, 구조, 자료관리 및 검색시스템 등도 그 용도에 맞추어 효율성 및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게 선택하면 된다. 물론 국가도서관 분관이 부족한 수장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건립된 예를 외국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건립하고자 하는 분관이 중앙관에 대한 보존서고 역할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일본의 관서관(關西館)처럼 장서를 분산보존함과 동시에 특화된 주제전문관의 역할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공간 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보존서고의 역할을 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 이들 모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앞서 지적한 입지 및 건축문제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보다 상세한 논거가 필요하다.

• 국립중앙도서관 부산 분관 설립 관련 타당성 검토 연구⁵⁾

2008년 4월 완료된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체제를 현재와 같은 서울 중심의 집중형에서 서울-행복도시(중부권)-부산(남부권)을 잇는 3관 형태, 즉 서울의 중앙관, 세종시의 디지털정책정보도서관(가칭), 부산시의 해양산업정보도서관(가칭)의 부산-집중형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행복도시에 국립도서관 또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추가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기본계획』 보고서의 분관 건립 중장기 계획에 제시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제아래 대전지역, 대구지역, 광주지역, 부산지역의 4개관 설립을 2개관으로 축소 집중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분관의 역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해양산업정보”에 대한 장서주제의 집중을 제안하였고, 이는 도리어 부산분관 건립 당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현 정권 교체 이전인 연구 수행 시점에서 “특화”라는 당시 정부기관의 구호를 반영했다고 판단되나, 국내에도 이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같이 국가에서 지정한 주제전문정보유통기관이 존재하고, 외국에서도 예를 들어 미국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은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가 지원하는 것처럼 국립주제전문도서관은 관련부처에서 지원 및 운영하고 있는 선례를 감안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양산업정보와 같이 특정한 주제 분야 도서관으로 분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주장은 기존 기관들과의 중복사업이 되며 최근 발표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104-106)의 추진전략에도 정면으로 상충되고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체제를 3관 형태로 정비할 필요성을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의 확장,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 수혜의 불균형 해소,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의 취약성과 특성화 미비 개선, 중장기 국토발전 정책 지원을 위한 국립도서관 체계화 전략 필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수장공간 확보 및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장서 분산보존의 필요성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IV.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특성화의 필요성과 타당성” 부분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가칭 ‘해양산업정보도서관’으로 특성화하고 부산에 설치하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가칭 ‘해양산업정보도서관’의 특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먼저 환경적 요인으로 해양·항만물류·수산·조선 분야가 국가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가경제발전 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기여도가 높으며, 지역집중도가 높다는 점, 거점화와 클러스터화를

5) 부산발전연구원. 2008.4.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설립관련 타당성 검토 연구』.

기반으로 한 육성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발전 잠재력이 획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내부적 요인으로는 관련 분야의 학술 및 산업정보에 대한 수요도가 높은 데 비해서 그에 걸맞는 정보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부산발전연구원 2008, 45). 특히 학술연구 활동과 기술수준 기반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해양산업이 경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 활동과 기술 수준이 미흡한 것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미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부산발전연구원 2008, 54).

상기한 이 보고서에 언급된 문제점에 대한 주장은 그 자체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산분관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선 국가적으로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R&D에 투자하지 않는 것(부산발전연구원 2008, 46)은 근본적인 국가 발전 전략의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산업 부문의 연구개발 수준에서 필요한 국내의 문헌 수집, 보존 및 제공의 책임을 가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같은 기관의 역할에서도 일부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한국해양연구원(KORDI)의 연구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다거나 조선, 기자재 산업이 선진국 대비하여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부산발전연구원 2008, 52-53) 등이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해양부문으로 특성

화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성화가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처에서 추진할 사항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전국 해양수산 관련 연구 과제 중 부산소재 대학들의 비중이 50%, 국립수산과학원의 비중이 25%라고 하였다(부산발전연구원 2008, 36). 것처럼 방대한 양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들의 대학도서관이나 국립수산과학원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관련 주제 문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은 아니다. 더욱이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이 특정한 주제 분야의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면, 자체적인 대학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의 정보자원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원을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외국사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지역적 산업발전을 위해 요구하는 자원의 형태와 수준(예를 들어, 학술지, 특허, 연구보고서, 회색자료 등)은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주로 연구목적에 가진 특정한 소수의 집단만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연구자층(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의 정보요구를 조사·분석한 결과(부산발전연구원 2008, 69)는 역설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부산 분관의 건립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님을 확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 Ulrich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기간행물 출판량”(부산발전연구원 2008, 58)의 분석에서 “대부분의 해당 연구자들이 외국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서 해외 연속간행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NDSL, KERIS 및 소속기관 도서관을 통해서 연속간행물을 보아왔다.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이 지금부터 “고급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할 전문도서관”(부산발전연구원 2008, 62)이 되기 위해, 결국 기존에 학술분야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온 기관들을 능가하는 특화도서관으로서 부산분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을 대표하는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현재로서는 그리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같은 기관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껏 과학기술분야의 특허, 학술회의자료(proceedings) 같은 자료의 확보와 제공에 노력해 왔고, 기본적 자료는 상당 부분 보유하거나 전자형태로 구축하고 있다. 만약에, 부산분관이 해양산업정보 특화도서관으로 건립된다면 최소한의 기본 장서를 확보하기 위해 이 기관이 보유하거나 구축하는 자원도 가져야 하고, 이는 업무 또는 장서의 중복을 피할 수 없다.

• 국립중앙도서관 부산 분관 건립 사업: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⁶⁾

2007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이 연구는 지난 1999년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연구개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설립의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존 타당성조사가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 하여 기술적 검토와 예비설계에 초점에 맞춘 것과는 달리 그 이전 단계에서 재정운용의 틀 속에서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 현실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예비타당성 평가보고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설립은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에는 전체적으로 연구수행 주체가 평가대상인 도서관이라는 문화시설이 국립박물관이나 국립극장 등의 기관과는 목적, 성격 및 임무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평가대상인 도서관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분석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볼 수 있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은 ‘도서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대표도서관이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6) 한국개발연구원. 2007.12.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사업: 2007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이를 단순히 “또 하나의 국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한다는 관점에서 기능을 분석하였다. 둘째, 이를 감안하여도 이 예비타당성 평가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이 수행할 기능 및 공공문화교육 기반시설로서 도서관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즉, 전적으로 비용의 투입과 효과의 산출이라는 경제 논리만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도서관이 그 어떤 경제적 “재화”와도 다른 성격으로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먼저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서관이라는 조사대상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제VII장. 정책적 분석.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낙후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건설교통부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사용하는 8개 지표항목, 즉 인구(인구증가율: 87위), 산업(제조업중사자비율: 62위), 지역기반시설(도로율: 9위), 교통(승용차등록대수: 94위), 보건·사회보장(인구당 의사수: 14위, 노령화 지수: 46위), 행정·재정·기타(재정자립도: 4위,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7위) 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결론은 부산은 재정자립도, 도로포장률, 도시적 토지이용률 등이 17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순위로 보아 다른 지역보다 양호하며, “지역낙후도로 통해보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사업의 기여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07, 199). 경제 정책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이 연구의 경제적 논리를 완전히 이

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할 때에도, 도서관 하나를 세우는 것이 상기한 바와 같은 직접적 지역낙후도 평가지수의 개선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음은 명백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립도서관 분관을 특정지역에 세우면 그 지역의 인구대비 승용차 등록대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구증가율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가? 인구 당 의사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도서관의 건립이 그 같은 지역경제 낙후도 평가지수의 어느 것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복잡한 수식으로 계산해 보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설립 평가에는 그런 낙후도 평가지수가 아닌 다른 기준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 것은 근본적으로 부산 분관 건립의 취지를 잘못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보고서들이 제시한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설립의 취지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분관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건립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도 갖는다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을 찾아 그 지역발전을 위하여 분관을 설립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었다. 국립도서관 또는 그 분관, 아니 어떤 형태의 도서관을 처음부터 지역발전 특히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건립하였다는 예는 없다.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 뒤따랐다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그것은 파생된 효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두 번째, 경제이론의 적용이나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제V장의 “가. 편익 추정에서의 이슈”는 부산 분관 건립의 편익을 “조건부 가치평가 모형(CVM)”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V장의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이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종종 논란이 되는 접근 방법이기도 하다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보통 “조건부 가치평가 모형(혹은 ‘조건부 가치추정법)’” 방법에서는 응답자에게 자신들이 현재 갖고 있지 않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 혹은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무엇을 포기하고 다른 상황을 받아들일 용의(Willingness to Accept, WTA)에 관하여 질문함으로써, 그들이 도서관과 같은 서비스의 간접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측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점은 “조건부 가치추정법”에서 어떤 것을 갖고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가치의 매우 상이한 측정치(very different estimates of value)”를 가져온다고 알려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방법의 약점은 전통적 서베이 접근방법으로부터 좋은 응답을 얻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 2006, 37).

그러나 이 예비타당성 평가연구는 전화서베이를 통해 “지불의사(WTP)”만을 갖고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의 편익을 추정하였다. 영국이 British Library의 경제적 영향력 연구(The British Library 2003)에서 CVM 방법을 사용하면서, 네 가지 요소 모두를 갖고 편익을 추정한 것과는 비교가 된다. 물론 분관이 현재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인 British Library와 같이 다른 요소들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 “가상 시장(hypothetical market)”

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불의사 외의 요소들도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이 예비타당성 연구는 또한 사람들의 지불의사(WTP)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을 구성하면서, 본문에서 스스로 인용하고 있는 미국의 NOAA 패널이 제안한 지침(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 2006, 157-158)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고려중인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하지 않았고, “대상 재화에 대한 대체재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또한 “응답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대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문 내용을 적절하게 구성하지 않았다. 우선 설문의 맨 앞부분에 “도서관이용에 대한 일반현황”을 조사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서 공공도서관의 방문 및 이용여부에 대하여 묻고 난 이후, 문2에서 국립도서관의 방문의사를 묻고 있다. 이것은 응답자로 하여금 국립중앙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동일 혹은 유사한 존재로 간주하도록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것보다는 응답자가 전국의 어느 곳에 살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 서비스를 원격으로라도 이용 본 적이 있는지 묻고, 분관이 부산에 건립될 경우 이용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이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읽어주도록 되어 있는 설명 카드의 내용은 “상당한 재원”, “가구 당 총 소득세의 추가적 인상이 필요”, “정보의 일부는 ...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음”, “귀하 가구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고, 그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 하라는 등 응답을 특정

한 방향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가 본문 중에 CVM 방법을 사용한 이전 연구들을 인용한 사례에 도서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는 데도 이번 평가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으므로 추정되는 헌법재판소 도서관과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사업 외에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도서관 연구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이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가 실제로 도서관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갖는 “비시장재”에 대한 이전 연구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고, 그런 만큼 연구 대상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결론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 행정도시 종합도서관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⁷⁾

2008년 5월 완료된 이 연구는 2006년부터 추진된 국립중앙도서관의 행정복합도시 종합도서관, 일명 ‘행복도시 분관’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것이다. 이 ‘행복도시 분관’은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세움에 따라, 그 핵심 기반시설로서 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포함되었다. ‘행복도시 분관’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예정지에 중앙행정기관과 충청권에 소재한 행정·연구기관의 행정 및 조사·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 체계의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전하는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인력의 정책개발과 연구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행정·문화·정보 중심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행복도시 분관’은 행정복합도시라는 “목적용 신도시”를 계획함에 따라 지역기반시설의 하나로서 그 건립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충청남도 연기군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행정복합도시는 지난 2007년 7월 착공에 들어갔고 중심 행정타운, 마을, 녹지 공간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향후 행정복합도시로 49개 행정기관과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8개 연구기관 및 대전지역의 공공기관 등이 이전할 계획에 있다. 이 분관 건립의 목적은 행정도시 내 공공 및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서비스 지원 및 자료수집, 공동이용 등 지역도서관과 기능을 연계하고, 지역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 및 이용 등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시민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의 정책개발 등 다양한 정보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타 지역의 분관 건립에서도 동일하게 거론되었듯이, 국립도서관이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기대되는 기능을 대행하거나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서관법’에서 명시하였고,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09-2013’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지역대표도서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갖는 것은

7) 한국개발연구원. 2008.5. 『행정도시 종합도서관 건립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이 도서관의 기능으로 언급한 지역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 및 이용과 같은 것은 실제로는 지역대표도서관이 맡아야 할 기능이다. 국립중앙도서관 행복도시 분관은 국가대표도서관의 한 구성요소로서 국가 전체의 장서 개발, 대 국민 서비스 및 모든 도서관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행하는 측면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국가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도서관과 시·군·광역자치단체가 직접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도서관 발전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인력으로 운영하는 지역대표도서관과 업무 체계, 재정, 책임 관할 등에서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행복도시 분관'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들 및 그 상위에서 업무를 총괄하게 될 지역대표도서관과 긴밀히 협력하되, 그 기능을 대행하거나 전담 혹은 분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행복도시 분관'의 건립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으며, 이 도서관의 잠재적 이용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10,374명, 2005년 정원기준) 및 가족(41,496명 추정, 한 가족당 4인 기준), 또한 이 도시로 이전하는 연구기관 임·직원 및 가족과 충청권 소재 행정·연구기관 소속 직원 및 주민이 포함되며, 이 도서관이 정책정보 서비스로 특화할 경우 전국에서 십만에 이르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공직자 등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2030년경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정인구 오십만 명과 중부권(대전,

충청남·북도) 정책정보 수혜자 십만 명, 주민 오백만 명이 행정도시 종합도서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즉 2030년경에는 이 도서관의 연간 이용자 수는 국립중앙도서관 연간 이용자(2007년 기준) 85만 명의 13.2%인 11만 2천명으로 예상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50). '행복도시 분관'은 정부가 매우 구체적 목적으로 계획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신도시"에 건립됨으로써 상기한 바와 같이 새로이 유입되는 인구집단을 잠재적 이용자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의 연평균 이용자수를 산정하여 연간 이용자를 12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계산방식이라면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포함한 충남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이나 기존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운영은 예산낭비가 된다는 결론을 쉽사리 유추할 수 있다.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은 중앙관이건 분관이건 "또 하나의"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그들과는 역할과 목표가 구분되는 국가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도 반복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물론 대(對)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수준, 범위, 내용 면에서 분명 공공도서관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도서관들도 그 점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British Library도 모든 자료를 망라해서 수집하고,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공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수준

의 자료는 소장하지 않는다. 공공도서관 수준의 자료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수집하고, 거기에서 직접 이용하도록 한다. 그런 맥락에서 국립중앙도서관 '행복도시 분관'이 행정복합도시에 소재하면서 정책정보 서비스를 특화분야로 한다면, 장서의 구성 또한 그 점을 반영해야 하고, 장서 및 서비스 수준과 범위 역시 일반 대중용이기보다는 연구 혹은 전문도서관 수준에 근접해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행복도시' 분관의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나,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건립의 목적이 공공도서관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 국립중앙도서관 또한 그런 측면을 강조하여 분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국립광주도서관 기본 구상 연구⁸⁾

2008년 6월 완료된 이 기본 구상 연구는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남권의 중추적 기능 수행 도시인 광주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특성화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광주 분관, 즉 가칭 ‘국립광주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수행되었다. 이 계획은 환경 및 고객, 학계와 전문가, 공·사립도서관 및 국외국립도서관 등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대표도서관 및 네트워크 허브로서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정준민 등 2008, 25). 이 연구는 이러한 계획 하의 광주 분관 건립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지리적 특성으로 광주시가 국토의 3각 거점(서울-부산-광주)에 위치하며, 6대 지역 거점(목포, 완도, 여수, 남원, 전주, 부안)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의 영향력을 가진다.

둘째, 기능적 특성으로 광주시가 한국 예술·문화·인권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광주비엔날레, 임방울국악제 등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도시로서 인식되고, 민주·인권도시로서 인정되고 있다.

셋째, 연계적 특성으로는 부산, 행복, 대구 등에 분관이 설립되더라도 광주와 연계성이 낮으며, 타 지역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설치되어도 국토의 서남단에 위치한 광주의 위치 때문에 장서와 서비스의 직접적 이용이 어려우므로 독자적 분관이 필요하다.

광주 분관의 건립 타당성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미래지향성에 주목하여 검토할 수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사진대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발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 연구에서 문화예술 특화도서관으로서 규정한 호남권 분관 건립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국립광주도서관의 기능을 매우 미시적인 것들로만 열거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 광주 분관이 국가대표도서관의 한 중요한 축으로서 국가장서개발 및 대 국민 서비스 제공의 맥락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큰 조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기능으로

8) 정준민 등. 2008.6. 『국립광주도서관 기본구상연구』. 광주광역시.

자료의 수집과 보존기능, 전시기능, 조사 및 연구기능, 사회교육기능, 기타 기능 및 복합문화 단지의 기능이 요약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회교육기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하나만이 제시되어 있다. 이 도서관이 문화·예술로 주제를 특화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호남권 서비스 포인트 역할도 수행해야 하므로, 여타 주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역시 제공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두세 가지 정도 할 일만을 예시하였을 뿐,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큰 그림”으로서의 기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앞서 분석한 분관에 대한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광주 분관의 목적이 현재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보완하려는 것임을 암시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연구에서는 주요 서비스 대상지인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숫자가 부족하고, 장서 수 또한 전체의 14.6%만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정준민 등 2008, 54). 어떤 지역의 국립중앙도서관 분관도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대행하거나,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 즉 현안의 해결책으로 설립되어서는 안 되므로, 광주 분관 연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광주 분관 건립의 필요성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도서관의 미비함을 이유로 하기보다,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 발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기반으로 한 미래 전략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광주 분관의 건립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정준민 등 2008, 56)이라는 비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시설의 구축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국립광주도서관의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력 외주화(위탁, 용역 관리)의 방안을 ‘효율적’이라고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조직을 사업부문(zone) 개념의 내부적 분관과 본부조직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부문(zone)에서 디지털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 인력은 ‘디지털의 속성과 발전 속도로 인해서’ 용역의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도서관계에서 많은 도서관들이 ‘효율성’ 혹은 ‘경제성’ 등을 근거로 하여,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외주로 맡기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점, 특히 지난 몇 년 간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의 주요한 업무 가운데 일부를 외주하고 관리 기능만 수행하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인력 외주화의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이 연구의 중대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체가 보유한 인력의 전문성을 꾸준히 계발하고, 국내의 모든 관중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각 분야의 전문적 요구에 대해 대응하고 그 분야의 발전에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기능이다. 다시 말하면 부산 분관이나 행복도시 분관

및 광주 분관이라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체제 안에 편입된 도서관 전문직은 누구든 국가대표도서관 사서들이 가져야 할 수준의 전문성, 업무 수행능력, 및 리더십을 가질 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효율적' 혹은 '경제적'이라는 미명 아래 업무를 외주에 맡김으로써 내부 인력이 해당 분야(예를 들어, 디지털 자원의 개발)에서 전문성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본관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전국 규모로 확대재생산하는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3.3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논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에 관련된 이전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는 이 분관 건립의 타당성 자체가 도서관계 내·외부의 여러 이해당사자들에게 그리 설득력 있게 인식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및 그에 따른 책무의 보다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분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점을 자체적으로 확고히 천명하지 못하였고, 도서관 외부의 관계 기관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도서관계 외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직접적 및 간접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거의 부재하고, 다른 나라 국가대표도서관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기대해야 할지에 대한 인식도 매우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실상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에 관하여 이러한 논란이 생겨난 근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지금까지 국가 모든 도서관의 대표가 아니라 공공도서관만의 대표 역할을 해왔다는 문제점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도나, 분관 건립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은 관련 주체들이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또 하나의 대규모 공공도서관 정도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측에서는 또 다른 공공도서관의 건립이라는 “중복”을 우려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측에서는 국립도서관으로 하여금 지역의 공공도서관 혹은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대행하게 하려는 기대를 갖는 것이다.

4.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방향 제안

이 연구는 지금까지 있었던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과 관련된 논란 및 문제점을 고려할 때, 분관 건립을 오히려 일반적 공공도서관 혹은 지역대표도서관과는 분리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대(對)국민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제한점을 검토하고, 분관 건립을 통해 이를 개선 혹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4.1 국립중앙도서관의 법적 및 업무적 역할의 분석

우리나라 ‘도서관법’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고, 그 아래 제18조(설치 등) 1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임을 명문화하고, 제19조(업무) 1항에서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 법 상 그리고 업무성격 면에서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도서관법’ 제3장. 제18조(설치 등) 1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표성”을 언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의 모든 도서관”을 대표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문화관광부(현행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에 속함을 아울러 규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외에 문화관광부에 소속되지 않거나 이 부처가 주관할 수 없는 다른 관공의 도서관들, 예를 들어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영향력 혹은 구속력을 행사할 권한과 의무 두 가지 모두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 간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조항도 없어 국립중앙도서관은 “한정된” 국가대표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동법의 제19조에 명시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가 반드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고유하게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부는

다른 도서관이 하는 역할과 중복되고, 일부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부분적으로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호의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법’의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규정된 것처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제1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심의·조정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관련시책을 시행 및 집행하는 역할만을 한다.

제3호에서 규정한 “국가서지 작성 및 표준화”에서 언급한 ‘국가서지’를 국립중앙도서관만이 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도서관으로서 ‘발행지, 제작지 등 자료가 만들어진 곳이 한국인 자료, 언어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발행된 자료, 모든 연령층의 자료’에 대한 출판물 목록인 『대한민국 국가서지』를 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도서관도 역시 ‘국가서지 작성 및 배포’를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선언하고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총목록』을 간행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900여 도서관과 전자정보교류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반드시 출판물 목록만을 ‘국가서지’라고 한정하지 않는다면, 국회도서관의 활동 또한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5호에서 규정한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역시 주로 공공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국립중앙도서관 ‘e-사서연수’는 50여개의 교육과정을 기본과정, 전문과정, 기타과정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전적으로 대학 및 전문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도서관 공간구성'과 '도서관 행정실무' 등 네 과목뿐이다. 물론 그 가운데 각종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활용', 'DDC 자료분류', '주제전문사서심화(법학)' 등 여러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학도서관 사서의 전문적 교육과 훈련은 한국 교육학술정보원(KERIS)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훈련 기능은 상당부분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공공도서관에 치중됨은 2007년 통계(국립중앙도서관 2008, 147-149)를 보면 알 수 있다. 2007년 모두 31개 과정에 36회 교육이 실시되었고, 대학, 전문도서관 대상 3개 과정 3회, 국립공공도서관 6개 과정 6회, 각종도서관(합반) 19개 과정 24회 및 기타 3개 과정 3회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2007년 교육훈련 이수자 2,190명 가운데 사서직 공무원이 1,522명, 사서교사 115명, 그리고 사립대학(교), 전문특수도서관 사서직원을 포함하는 민간사서가 488명이다. 사서직 공무원 가운데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국립대학의 사서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 사서의 비중이 클 것임이 명백하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은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수집과 서지데이터

생산과 정리업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유럽 여러 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서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상이하다.

우선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서지센터로서 수행할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서지레코드의 작성을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관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그 초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외주로 작성한 목록레코드, 원문 및 목차정보 등을 내부에서 완전 검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검수과정마저 외부의 감리기관에 위탁하기 시작하였다.⁹⁾ 이처럼 서지레코드 생산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스스로 국가서지센터로서의 위상을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의회도서관, 영국의 British Library, 일본국회도서관 등의 경우에는 고급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목록 전담부서에서 고품질의 서지 및 레코드를 생산하여, 국내·외 도서관 및 유관 업체, 그리고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서지센터의 역할을 단순한 외주의 관리기능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핵심적인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사실상 사서직원들이 지속적 실무수행과 교육을 통한 서지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주요한 선진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은 서지업무를 담당하는 사서

9) 국립중앙도서관, 2008.6. "2008년도 도서관정보화DB 구축사업 감리 제안요청서." 4. (1) 주요자료원문정보DB구축 내용: 일반원문자료 6,540책 2,891,200면(*면수기준); 시각장애인용 원문자료 230책 105,800면(*면수기준); (2) 국가자료목차정보DB구축: 38,000책 171,000,000byte(*byte 기준); (3) 기사색인 및 초록정보DB구축: 63,000건 96MB(*건수, 용량 모두 총족); (4) 국가자료 종합목록 DB구축: 600,000건 대상.

들이 내부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으로,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도서관계에서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연구와 개발 등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들은 전문성을 계발하고 성장하는 대신 관리 업무에 치중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리더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업무 또한 “납본 대행 외주 용역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8, 30). 현재 국내 출판 도서 및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에 대한 납본 대행 수집 업무를 외주에 맡기고 있으며, 국내출판 도서와 비도서 자료는 자료기획과 수집팀에서, 연속간행물은 정책자료과 연속간행물실에서 납본 대행을 관리하고 있다. 연속간행물은 한국잡지협회, 한국전문신문협회, 대한출판협회를 납본 대행업체로 선정하여 납본을 받으며, 마찬가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관리 역할만을 담당한다.

넷째, 국내·외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의 역할 및 대(對) 국민 홍보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19조(업무) 6호는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8호는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최근 다시 부각된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분쟁과 미국의회도서관이 독도에 대한 LCSH 주제표목을 ‘Tok Island(Korea)’에

서 ‘Liancourt Rock’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사례¹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회도서관은 2007년 12월에 그동안 사용되어 오던 이 주제표목을 프랑스어 명칭으로 바꾸려고 하는 제안을 공식화 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2008년 7월 이러한 변경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에서 이를 인지한 캐나다 거주 한인 사서가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의회도서관에 항의하지 않았더라면 LCSH에서 ‘Tok Island(Korea)’는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 같이 한국과 일본 혹은 중국 사이에 분쟁이 되는 주제에 대한 주제표목이 세계에 유통되고 우수한 도서관들에 소장되는 해당 주제 간행물의 양이나 시류의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일찍이 지적된 바 있다(윤정옥 2001). 국립중앙도서관이 국제도서관계의 발전과 변동을 적시에 숙지하고,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적절하고 권위 있는 대외적 창구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더라면 그런 상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관련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외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테면, 전 세계의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LCSH가 무엇인지, 그 안의 주제표목 하나가 변동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보도 자료를 내거나 도서관 웹사이트에서라도 공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10) 조선일보, 2008.7.17. 목요일 “캐나다의 한국인 司書가 ‘독도’ 지켰다.”

고,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부나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것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마땅히 해야 할 대(對) 국민 서비스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간추리자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라고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현재까지는 “국가대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두드러지며, 모든 관중을 선도하기 위한 지원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진정한 국가 서지센터가 아니라, 외부기관에 위탁한 서지관련 사업의 외주 관리자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국내·외 도서관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여 공식/비공식적 대외 교류 및 창구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국가 차원의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기관이 아니라 시행 및 집행기관이므로, 도서관 전체 발전을 위한 장기적, 거시적 비전을 독자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4.2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방향

4.2.1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필요성

지금까지 논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장서의 수집과 보존을 위해 필요한 서고공간의 확보라는 측면이고, 둘째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요 기능의 분담 또는 이관을 통한 국가대표도서관 정체성 확립 및 기능 확장이라는 내실화 측면이다.

첫째, 국가장서의 수집과 보존을 위해 필요한 서고공간의 확보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최우선적 목표가 되어 왔다. 이러한 목표는 2005년 10월 발표된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인 『국립중앙도서관 2010』에 천명한 ‘국내 자료보존처리센터 역할 수행 및 권역별 자료 보존관 건립’에 근거하여 추진된 것이다. 서고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각각 2002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기준으로 증가추이를 예측했을 때 2020년에는 최소한 2천만 권을 소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서고공간의 2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다(윤희운 2006, 53). 이러한 공간의 확보를 위해 당시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따라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는 분산될 수 있도록 부산에 건립할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같은 국가장서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서고공간의 확보는 지금도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추진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며, 여러 연구들이 그 필요성을 거듭해서 지적해 왔다.

둘째, 국가대표도서관 정체성 확립 및 기능 확장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분관을 통해 외연의 확장과 더불어 그 본연의 기능을 재확립하는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법적, 구조적, 실질적 기능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웠거나 미비한 주요 기능들을 분담 또는 전담하게 함으로써 국립도서관의 정체성 확립 및 기능을 확장하고, 직접적인 대(對) 국민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 및 확대하며,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도서관 기능을 분담 및 특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4.2.2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지향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건립이 수장 공간의 확보라는 현안의 해결과 더불어, 모든 관중의 도서관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정한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지향점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체성 확립 및 기능 확장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국가서지센터의 역할 일부를 전담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으로 이관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국가서지센터의 기능은 국가자료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국가자료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대표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즉, 국가서지센터로서 후대에 물려줄 영속적 가치를 갖는 국가장서를 수집, 확보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기능을 외주

로 위탁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어느 주요한 국가도서관에서도 전례가 없는 경우이다.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매년 최저가로 입찰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은 대부분 임시계약직 직원을 고용하여 서지레코드 생성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¹¹⁾ 미국의회도서관, 영국국가도서관, 일본국회도서관 등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은 초급에서 고급수준의 목록전문사서가 단계별로 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서지레코드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목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해서 계발하고, 서지업무의 실무 및 이론 발전에 기여하는 리더로까지 성장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여하한 이유에서든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국가서지센터 기능의 일부를 회복하고,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직접 수행하게 하는 것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책무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 체제와 인력구조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서지센터 업무의 일부를 직할분관의 설립과 함께 이관하여, 분관에서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사서교육·훈련센터의 역할을 전담함으로써 재교육 및 연수에 참여하는 사서들의 편의성과 교육효과를 높임으로써 사서 및 도서관 업무의 전체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서교육·훈련센터 기능의 이관은 사서들의 교육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하

11)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 외주를 담당하는 기관이 일당 4-5만원 지급의 임시직 인력을 구인하는 광고문을 전국의 문헌정보학과에 보내고 있다; 또한 심경. 2008. 우리나라 목록 외주의 현실과 문제점. 『도서관문화』, 49(2): 58-66를 참조할 수 있다.

는 사서의 재교육 및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오는 사서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의 한정된 기숙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인근에 적절한 비용 수준으로 일정기간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분관이 사서교육·훈련센터의 역할을 전담하면 전국의 사서들로 하여금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사서교육·훈련센터기능의 이관은 지방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지역 전문 인력 활성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은 내부의 전문 인력을 갖고 교육을 실시하기보다 전국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나 외부 인사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맡기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여 왔고, 그러한 기능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에서도 아무런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33개 대학 가운데 서울에 10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서 교육에 필요한 많은 분야에서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교수들이 강의를 맡고 있으며, 우수한 인력 풀이 활동하고 있다. 더욱이 며칠을 묵어야 하는 수강생들과는 달리 대부분 일회만 강의하는 교수들은 지방의 분관으로 이동하여 강의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양질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국가장서의 수장 공간 기능을 분담하고, 국가장서의 수집, 분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분관은 국가장서의 수장을 위해 단일 건물의 일부를 밀집서가(compact shelving) 전용공간으로 할당하거

나, 부지 내에 별도의 창고형 고밀도서저장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곽동철 2006, 144-148). 분관의 건립이 완공되는 시점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일반장서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이관하여 서고에 수장하고, 향후에는 납본 받는 2부 가운데 1부를 소장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장서를 확충하도록 한다.

분관의 수장 공간은 이전의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관련 연구들에서 강조되었던 것처럼(부산광역시 2006; 부산발전연구원 2008; 국립중앙도서관 2006), 지역 도서관의 공간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겠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등의 수장 공간 부족은 관종별 공동보존서고 건립과 같은 별도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며,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분관의 장서는 명시된 역할에 바탕을 둔 장서개발 목표에 따라 구입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으로 확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아래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지원센터'의 역할을 전담할 경우, 다국어, 다문화 자료 및 대형 활자 자료, 오디오북의 구입 등의 특성화된 장서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에 관한 자료 및 한국인에 의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처럼 분관이 소관 하는 지역에 관한 자료 및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자료(Regional Materials) 장서개발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분관의 설립 초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이관하는 장서의 성격(예를 들어, 복본의 이관)과 납본 자료 때문에 일부 장서가 중복될

수 있고, 그러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점차 국립중앙도서관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 국가장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2)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접적 대(對) 국민 도서관 서비스 강화 및 확대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던 국가장서 및 서비스의 이용 기회를 확장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분관은 국가장서의 수장 공간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연구자, 학생, 기업, 시민 등으로 하여금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직접 국가장서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분관은 서울의 일부 지역 주민만 향유할 수 있던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타 지역에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5년에 시작된 '작가와 함께 하는 책 세상'과 같은 지식·교양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도서관 음악회, 강연회, 전시회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07년 한 해만 해도 '책이 있는 풍경 사진전', '조르조 만나보라 사진전', '책은 문화의 꽃 그 뿌리는 고서' 등과 같은 전시회를 8회 개최하였고,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을 위한 도서관 음악회, 국립중앙도서관 62주년 기념음악회, 세계적 생태학 전문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초청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08, 241-245). 그러나 이 같은 행사는 현재까지는 전적으로 서울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분관을 건립하고 거기에서 순회행사 등을 진행하면 서울의 지역의 국민에게도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화

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의회도서관도 거의 매일 관내에서 음악회, 영화상영,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Library of Congress 2008a). 2007-2008년에만 해도 러시아의 Moscow Sretensky 사원합창단, 체코 필하모닉 체임버 오케스트라, 웨스트사이드스토리 50주년 기념 공연 등 다채로운 클래식 및 대중, 민속공연 등이 무료로 진행되었다(Library of Congress 2008b). 이것은 국립도서관이 문화적 체험 공간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같은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은 국립중앙도서관 수준의 서비스로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공공도서관이 하는 역할을 대행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 분관의 건립은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러한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지역에 확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구독하는 고가(高價)의 해외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자원 서비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국내학회지 및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관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외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소장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2008). 물론 도서관 정기이용증을 가진 사람들은 일부 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서비스는 지역적인 제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분관은 '관내 이용'이라는 구독조건 때문에 반드시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ProQuest Academic Research Library, PQDD, ANSI-Complete

등 고가의 해외 웹 데이터베이스들을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포인트 역할을 함으로써, 대(對) 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다.

(3) 지식격차해소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분담 및 특성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지원센터' 역할을 전담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지식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서비스하는 전국의 공공, 학교, 대학 및 특수도서관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노인, 새터민(탈북자), 다문화가정 등 장애인 이외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분관이 기능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 인구를 위해 다양한 외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소양을 가진 전문 사서를 중심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와 유사한 수준의 장서와 프로그램을 분관에 두고, 전국에 산재한 이용자들 및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을 위한 대형 활자(large print) 자료, 오디오북 등 특정한 부문이나 형태의 자료를 집중 확보 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상호대차와 원문제공 서비스를 조정해야 한다.

이 같은 기능은 분관이 주관하되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관이 소재한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주민, 노인, 혹은 새터민 출신의 수 등에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 그보다는 이들을 위한 전국 대상의 장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상호대차와 원문제공 서비스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 가능성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법적, 기능적 당위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보다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분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향할 바를 제안하였다. 현행 법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이와 관련된 이전의 연구와 정책방향에서 분관을 “또 다른 대규모 공공도서관”과 동일시하는 시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분명 국가대표도서관이 분관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분관을 건립하는 목적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가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지, 공공도서관 또는 지역대표도서관, 또는 주제전문도서관 등의 역할을 대행하고자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건립은 이전의 여러 연구 및 이해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역균형”이라는 단순한 지역안배 차원의 논리를 연상케 하는 정책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정책방향이 무엇보다도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차원의 기록문화유산 보존 및 지식강국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을 재정립하고, 국가 전체의 도서관 체제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지향점으로는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국가서지센터 기능 분담, 사서교육 및 훈련센터의 역할 전담, 국가장서 수장 공간 제공 및 수집, 보존, 활용 분담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 정체성 확립 및 기능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국가장서 및 서비스의 이용기회 확장,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의 지역 확산, 고가의 전자자원 서비스포인트화 등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접적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제안하였다.

다. 셋째, 분관은 노인, 다문화집단 등 다양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지원센터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식격차 해소 기능 분담 및 특성화를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특정한 입지나 건축방안, 규모,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보다는 분관이 어느 곳에 어떤 조건으로 건립되든, 국가대표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지향할 바를 제안하였다. 향후 다른 지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 중·장기 정책방향을 분석 및 제안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광동철. 2004.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수립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205-227.
- [2] 광동철·심 경·윤정옥. 2006.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치·운영 및 국가대출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도서관 정책연구: 2006-1).
- [3] 국립중앙도서관. 2008. 『2007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서울: 동 도서관.
- [4]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DB 소개 -- 외부기관 DB』. [online] [cited 2008.8.4]. <<http://www.nl.go.kr/>>.
- [5] 김세훈. 2007. 『지역대표도서관 기반 조성 및 운영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6]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7] 부산광역시. 2006.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기본구상 연구』.
- [8] 부산광역시. 2008. 『2008年度 主要業務計劃』.
- [9] 부산발전연구원. 2008.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설립관련 타당성 검토 연구』.
- [10] 심경. 2008. 우리나라 목록 외주의 현실과 문제점. 『도서관문화』, 49(2): 58-66.
- [11] 윤정옥. 2001.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 표목표(LCSH)의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비교 연구. 『도서관』, 56(1): 30-55.
- [12] 윤희운. 2006.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 기본계획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13] 정준민 등. 2008. 『국립광주도서관 기본구상연구』. 광주광역시.

- [14] 정현태. 2008. 강원 및 경상권역 지역대표도서관 활성화 방안. 강원경상지역 도서관정책 세미나.(일시: 2008년 6월 20일, 장소: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 [15] 한국개발연구원. 2007.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사업: 2007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16] 한국개발연구원. 2008. 『행정도시 종합도서관 건립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17] The British Library. "British Library: Economic Impact Assessment: Questionnaires Used in Survey." 28-29. [online] [cited 2008.7.11].
<<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increasingvalue/publicvalue/confpres/quest.pdf>>.
- [18] The British Library. 2003.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British Library." [online] [cited 2008.7.11].
<<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increasingvalue/publicvalue/confpres/pungelwe-smarks.pdf>>.
- [19] The British Library. 2003. "Results of the Study." [online] [cited 2008.7.12].
<<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increasingvalue/publicvalue/value.pdf>>.
- [20] 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 April 2006. "Community Impact and Benefits." Prepared by the Carnegie Mellon University, Center for Economic Development. [online] [cited 2008.7.11].
<<http://www.clpgh.org/about/economicimpact/CLPCommunityImpactFinalReport.pdf>>.
- [21] ILFA. Section of National Libraries. 1997. "Guidelines for Legislation for National Library Services." Prepared by Peter Johan Lohr, with the assistance of Elizabeth A. S. Sonnekus. [online] [cited 2008.7.11]. <<http://www.ifla.org/VII/s1/gnl/gnl-il.htm#intro>>.
- [22] Kent, A. & et al. 1979. *Use of Library Materials: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Study*. New York: Marcel Dekker.
- [23] Library of Congress. 2008a. "Public Events at the Library of Congress." [online] [cited 2008.8.4]. <<http://www.loc.gov/loc/events/>>.
- [24] Library of Congress. 2008b. "2007-2008 Schedule of Performances." [online] [cited 2008.8.4]. <<http://www.loc.gov/rr/perform/concert/0708-schedule.html>>.
- [25] Line, M.B. & Line, J. 1979. "Concluding Notes." In: *National Libraries*, edited by Maurice B. Line and Joyce Lin. London: Aslib: 317-318. 재인용: IFLA. 1997.
- [26] Schick, F.L. 1971.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Library Statistics."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25(1): 2-11. 8-9. 재인용: IFLA. 1997.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Dong-Chul Kwack, 2004,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Missions and Visions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3): 205-227.
- [2] Dong-Chul Kwack, Kyung Shim, and Cheong-Ok Yoon. 2006. *Daehak Doseogwan Gongdongbojonseogo Seolchi Unyeong mit Gukga Daechulchegye Guchuke gwanhan Yeongu*.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Doseogwan jeongchaek yeongu: 2006-1).
- [3]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8. *2007 Annual Report*.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4]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DB sogae--Oebugigwan DB.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omepage. [online]. [cited 2008.8.4]. <<http://www.nl.go.kr>>.
- [5] Se-Hun Kim, 2007. *Jiyeok Daepyo Doseogwan Giban Joseong mit Unyoung hwalseonghwa Bangan*. Seoul: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 [6]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Bureau. 2008(Aug.). *Doseogwan Baljeon Jonghap gyehoek, 2009-2013*. Seoul: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Bureau.
- [7] Busan Metropolitan City. 2006(Dec.). *Gukrip Jungang Doseogwan Busanbungwan Gibongusang Yeongu*.
- [8] Busan Metropolitan City. 2008. *2008nyeondo Juyo Eopmugyehoek*.
- [9] Busan Development Institute. 2008(Apr.). *Gukrip Jungang Doseogwan Busanbungwan Seol-libgwanryeon Tadangseong Geomto Yeongu*.
- [10] Kyoung Shim. 2008. "Woorinara Moklok eojui." *Doseogwanmunhwa*, 49(2): 58-66.
- [11] Cheong-Ok Yoon. 2001. "The Library of Congress Jujemyeong Pyomokpyoui Hangukgwa Ilbon gwanryeon Jujepymokui Bigyyo yeongu." *Doseogwan*, 56(1): 30-55.
- [12] Hee-Yoon Yoon. 2006(3). *Guklip Jungang Doseogwan Bungwangeollip Gibon Gyehoek Yeongu*.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13] Jun-Min Chung, et al. 2008(6). *Guklib Gwangju Doseogwan Gibongusangyeongu*. Gwangju Metropolitan City.
- [14] Hyun-Tae Joung. 2008. "Gangwon mit Gyungsanggwonyeok Jiyeokdaepyo doseogwan Hwal-sunghwa Bangan." Gangwon Gyungsangjiyeok doseogwan jeongchaek seminar(Date: 2008. 6. 20, Busan Metropolitan City Simin Municipal Library).
- [15]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7(Dec.).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usanbungwan*

Geollipsaeop: 2007nyeondo Yebi Tadangseong Josa Bogoseo.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16]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8(May). *Haengjeongdosi Jonghapdoseogwan Geollipsaeop Yebi Tadangseong Josa*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